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8.11.(화) 8월 2주차 (제26-45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통상) 美, 폴리실리콘·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 도입과 15% 관세 부과 발표 ····· 2
• (핵심광물) 美, 텅스텐 스크랩 국내 우선공급 조치와 공급망 영향 ····· 5

미국 경제통상 동향

• (조선업) 美 행정부, 존스법(Jones Act) 면제 90일 연장 및 요건 강화 ····· 8
• (관세) 美 상원, 러시아 원유·가스 구매국에 2차 제재 관세 부과 법안 통과 ····· 9
• (입법) 美 공화당 상원의원,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권한 부여 법안 발의 ····· 9
• (반도체) 美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 '파운드리 실사 규칙' 집행 강화 요구 ····· 10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의회) 원전 에너지, 관세, 예산 등 입법 6건 ····· 11
• (행사) CSIS, Peterson, ITIF 관련 행사 ····· 12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3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14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8.12(수)	• 7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CPI·Core CPI)
8.13(목)	• 8월 둘째 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Weekly Jobless Claims) 발표
8.14(금)	• 7월 소매판매(Retail Sales) 지표 발표
8.18(화)	• 7월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 발표

⊙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통상) 美, 폴리실리콘·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 도입과 15% 관세 부과 발표

- 트럼프 행정부, 폴리실리콘의 대중(對中) 의존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
-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MIP) 도입과 15% 관세를 부과
- 동 조치에 대한 업계 환영과 원가·비용 상승 및 사재기 우려 혼재

1. 개 요

□ 트럼프 대통령,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MIP)를 도입하고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서명(8.6)

* '26년 12월 4일(미 동부시간 00시 01분)부터 동시 시행

• (배경) 상무부의 무역법 232조 국가안보 조사 결과에 따라, 폴리실리콘 공급망의 대중(對中)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단

- (근거) ①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비중 급감('05년 50%→'24년 2% 미만), ② 반도체 웨이퍼 생산 비중 하락('90년 37%→'24년 10%), ③ 태양광용 잉곳·웨이퍼는 사실상 전량 수입 의존

* 중국이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의 90% 이상을 점유, 반도체용 수요는 전체 폴리실리콘 수요의 2.4%에 불과

- 동 조치는 '18년 트럼프 1기 당시 부과되어 '26.2월 만료된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관세*를 대체하며, 적용 대상을 파생제품군 전반으로 확대*

* 기존 세이프가드는 셀·모듈 2개 품목에 한정됐으나, 이번 조치는 원료·중간재까지 포함

2. 주요 조치 내용

□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s) 도입 및 잉곳·웨이퍼·태양전지·모듈 등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 부과

• (최저수입가격) 품목별 최저수입가격 이하로 신고 시 그 차액만큼 종량세 부과

- **(대상 품목)**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등 4개 품목군

  * 폴리실리콘 $21/kg, 잉곳·웨이퍼 $100/kg, 태양광 셀 $0.22/W, 모듈 $0.38/W

- **(운영 방식)** 수입자는 통관 시 최초 독립거래가(arm's length price)*가 기준가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포고문 발표 전 체결된 고정계약 서류 제출 필요

  * 수입품의 최초 판매 당시의 조작되지 않은 실제 시장 가격(arm's length price)

- **(종량세 부과)** 서류 미제출 시 MIP 전액에 해당하는 종량세 부과,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신고가격이 MIP에 미달하면 차액만큼 종량세 부과

- **(상호조정)**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국이 동등한 수준의 MIP를 자체 도입할 경우, 상무부·USTR이 해당국에 대한 MIP·관세 조정을 합의 가능

- **(제재)** CBP가 서류상 중대한 허위·불이행을 확인할 경우, 해당 수입자·계열사는 폴리실리콘·파생제품의 미국 수입이 영구적으로 금지되며, 추가 벌금 부과 가능

• **(관세) 기존 관세에 15% 관세를 추가 부과, 무역협정 체결국은 관세 상한 적용**

- **(적용 방식)** 잉곳·웨이퍼·태양전지·모듈 등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대상 기존 관세(MFN·FTA 세율)에 15% 관세 추가로 가산되는 종가세(ad valorem) 방식

- **(경제권별 상한)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 등 **무역협정 파트너에는 기존 관세+232조 관세 합산 15% 상한 적용**, 영국은 10% 고정 우대율 적용

- **(온쇼어링 인센티브)** 미국 내 생산(온쇼어링) 계획 발표 시, 해당 기업의 신규 투자 약정 금액에 비례한다고 판단되는 물량만큼 관세 면제*

  * 미국 내 시설 건설, 개보수, 확장 약속, '29.1.20까지 착공 개시 확약 등

- **(관세환급)** ① 반덤핑·상계관세 비대상 품목, ② 무역협정 파트너국 및 향후 무역·안보협정 체결국 생산 제품, ③ 해당 제품에 함유된 폴리실리콘이 100% 무역협정 파트너국 제품일 것,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관세환급 가능**

- **(사재기 모니터링)*** 상무부는 시행일(12.4) 이전 사재기(stockpiling) 정황을 포착할 경우,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공조해 해당 기업·계열사의 수입 제한 조치 가능

  * 상무부는 시행 이후에도 수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통령에게 추가 232조 조치를 건의하거나 반대로 구제 조치의 완화·종료 건의 가능

3. 현지 반응

□ 조치에 대한 업계 환영과 원가·비용 상승 및 사재기 우려 혼재

• (업계·협회) 이번 조치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나 비용 부담 우려도 병존

- 중국 연계 공급망의 원가 이하 덤핑·美 법률 회피 관행을 저지 및 MIP·종가세·위반제재가 결합된 실효적 집행 구조를 높이 평가(First Solar)
- '국내 생산 투자 지속 및 장기적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라며 환영(코닝社)
- 美 태양광 제조기반 재건 성과는 인정하나, 관세·MIP 도입이 제조업체 부담 및 가계·기업의 에너지 비용 상승 초래 우려 제기(미국태양광산업협회)
- 반도체 함유 가전제품 등이 파생제품 목록에서 제외된 점을 환영, 이행 유예기간,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상한을 존중한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소비자기술협회)
- '美 태양광 시장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평가, 특정 원산지가 아닌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 적용되는 점에 주목(PV Tech)

• (언론) 對中 견제라는 전략적 명분과 현실적 부담을 동시에 조명

- 對中 AI·에너지 경쟁력 확보 차원의 견제 조치로 해석, Hemlock·Wacker 등 미국 내 생산기업 보호가 핵심 목적이라고 분석(로이터)
- 시행일(12.4)이 11월 중간선거·9월 美中 정상회담(9.24) 이후로 설정된 점에 주목, 물가부담·통상협상 일정을 고려한 정치적 타이밍으로 평가(폴리티코)
- 태양광 프로젝트·설치업체에는 추가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 최소가격 규정은 패널·셀 가격 상승 및 프로젝트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블룸버그)

• (기타) 유예기간 사재기 우려 제기 및 수입 물량 조절 권고, 원가 상승 전망

- 4개월 유예가 사재기 유인을 초래한다고 언급하고 사재기 방지 규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 고객사에는 수입물량 조절을 권고(법률 자문)
- 이번 조치가 업계에 '구조적 가격 하한선(structural floor)'을 만들었다고 평가, 수입 모듈 원가가 watt당 $0.40대 초중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월가 리서치)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포고문(8.6), 폴리티코(8.6), 블룸버그(8.6) 인사이드(8.10) 등 현지 언론 종합

(핵심광물) 美, 텅스텐 스크랩 국내 우선공급 조치와 공급망 영향

■ 美, 8.27일부터 1년간 텅스텐 스크랩·블랙매스의 국내 우선공급 및 해외 반출 제한 시행
■ 중국 중심의 생산구조와 미국 내 생산·재활용 역량 부족으로 단기 공급 확대에는 한계
■ 미·중 공급망 재편에 따라 한국 등 非중국권 텅스텐 공급원의 전략적 중요성 확대 전망

1. 개 요

□ 美, 텅스텐 스크랩 해외 유출 제한을 통한 국내 공급 확대

-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생산법(DPA) 제101조에 따라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 확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문*을 발표(7.30)**

  *「Presidential Determination Pursuant to Section 101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as Amended, on Recoverable Critical Minerals and Materials」

  - 이에 산업안보국(BIS)은 텅스텐 스크랩 등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고 미국 내 우선 공급을 의무화하는 임시 최종규칙 발표(8.6)

  - '26.8.27일부터 1년간 미국 내 텅스텐 폐기물·스크랩(Schedule B 8101.97.00.00) 월 판매량의 100%를 미국 소재 개인·법인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

□ 전략 소재인 텅스텐의 공급망 취약성 부각

- **텅스텐은 방산·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활용되는 전략 소재이나, 미국은 국내 생산기반이 부재해 높은 수입 의존도 지속**

  - 미국은 '15년 이후 텅스텐을 상업적으로 채굴하지 않고 있으며, '24년 기준 국내 소비량의 50% 이상을 순수입에 의존

- **중국은 세계 텅스텐 광산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며, '25년 2월부터 일부 관련 품목·기술의 수출허가를 의무화해 글로벌 공급 불확실성 확대**

2. 상 세

□ BIS, 텅스텐 스크랩 국내 우선공급 및 해외 반출 제한

-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CMM)'에 해당하는 텅스텐 폐기물·스크랩과 블랙매스*에 미국 내 우선판매 의무와 해외 반출 제한을 동시에 부과**

* 리튬이온배터리를 파쇄해 생산한 핵심광물 함유 재활용 원료

- 대상 물량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 물리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BIS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해외 판매·반출 가능

〈미국 텅스텐 수급 현황('24~'25년)〉

구분	2024년	2025년	비고
광산 생산	-	-	'15년 이후 생산 부재
수입(총)	7,470	8,260	전년비 +11%
수출(총)	3,570	3,470	전년비 -3%
순수입의존도	〉50%	〉50%	높은 대외 의존

[자료: USGS, Mineral Industry Surveys(2025.12) 및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 **기업별 여건을 고려해 BIS의 사전 승인을 통한 조정·예외 적용 절차 마련**

- ▲국내 판매의무로 과도한 부담 ▲국내 핵심광물 공급 감소 ▲해외 가공·정제 후 미국 재반입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등의 경우 조정·예외 신청 가능

- 예외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내 판매의무가 유지되며, BIS가 서면으로 임시 면제를 승인한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

□ **텅스텐 스크랩 국내 공급 확대 위한 재활용 인프라 확충 필요**

• **원료 확보 이후 가공·재활용 역량이 공급망 병목으로 작용**

- 원료를 국내에 확보하더라도 정광·스크랩을 산업용 소재로 전환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은 7개사 수준에 그쳐, 가공·재활용 역량은 제한적

-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국내 공급 기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미국 내 처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 **네바다州 텅스텐 자원, 美 최대 규모 추정에도 생산까지 장기간 소요**

• **대규모 신규 자원 발견으로 미국 내 텅스텐 생산 재개 가능성 부각**

- 자원개발사 3 Proton Lithium(3PL)은 약 178만 톤의 텅스텐 자원을 추정했으며, 상업성이 확인되면 미국 내 차순위 매장지의 5배를 웃도는 규모*

* 3PL 자체 추정치로, 상업성은 미확인됐으며, NASA의 탐사 제한구역은 산정에서 제외

• **채굴·탐사 제한과 장기간 개발로 단기 공급 확대에는 한계**

- 3PL 광업권의 약 3분의 1이 NASA 위성 교정지역과 겹치며, 토지관리국은 '23년 해당 구역 중 약 44㎢(17제곱마일)에 대해 20년간 채굴·탐사를 제한
- 해당 제한이 해소되더라도 상업 생산까지 빨라도 약 5년이 소요될 전망

3. 시사점

□ 핵심광물 공급망의 자국 내 확보 움직임 확대

• **미국의 핵심광물 확보 정책이 신규 채굴을 넘어 스크랩·재활용 원료의 해외 유출 제한으로 확대되며, 자원 확보 수단이 다변화**

- 미국은 텅스텐 스크랩과 배터리 재활용 원료 등에 국내 우선공급 조치를 적용하며 핵심광물의 자국 내 순환·가공 기반 구축을 추진
- 특히 미국산 블랙매스의 해외 공급 감소 시 한국·동남아 재활용업체의 니켈·코발트·망간 원료 확보가 제약될 가능성

□ 미·중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중국산 텅스텐 중요성 확대

• **중국의 수출통제와 미국의 국내 자원 정책이 맞물리며, 안정적인 비중국산 텅스텐 공급망 구축 필요성 증대**

- 미국은 상업 생산이 부재한 가운데, 신규 광산은 인허가 등 제도적 절차로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단기간 내 자체 공급 확대에는 한계
- 비중국권 텅스텐 광산 생산은 '26년 수요 대비 약 2만 1,000톤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지속
- 이에 따라 한국 상동광산 등 비중국권 신규 공급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김예나
▪ 자료원	백악관(7.30), 연방관보(8.6), 로이터(8.6), S&P 글로벌(8.5), FT(8.1) 등 종합

(조선업) 美 행정부, 존스법(Jones Act) 면제 90일 연장 및 요건 강화

- **美 백악관,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존스법 면제 90일 추가 연장**

- 중동 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외국선박의 미 연안 운송을 허용하는 존스법 면제*를 8월 17일부터 90일 추가 연장

* 존스법 면제 경과 : 최초 60일 면제(3.17~5.17) → 1차 90일 연장(~8.16) → 2차 90일 연장(8.17~11.14)

- 백악관은 지난 3월 이후 200건 이상의 면제를 통해 원유 1,400만 배럴 이상, 연료 2,000만 배럴 이상이 운송됐으며, 미 연안 수송량이 최대 50% 증가했다고 설명

- **美 조선·해운업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면제 범위 및 승인 절차 강화**

- 기존 면제 대비 개별 항차별 심사·승인 방식을 도입하고, 국방부 등이 해사청(MARAD)과 협의해 존스법 적격선박의 가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도록 절차 강화

- 면제 대상을 원유·석유제품 등 에너지 관련 품목과 비료·대두유 등 일부 필수품으로 한정해 외국선박의 미 연안 운송 허용 범위 축소

- 동 조치는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비상 수송 능력을 유지하되 외국선박 활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공급 안정과 자국 해운·조선업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

〈Jones Act 면제 조치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존 면제	금번 연장(8.17~)
적용 기간	60일 면제(3.17~5.17) → 90일 연장(5.18~8.16)	8.17부터 90일 추가 연장
승인 방식	지정 품목에 대한 포괄적 면제	개별 항차별 심사·승인
美 선박 확인	항차별 해사청 협의절차 미적용	美 적격선박 가용 여부 우선 확인
대상 품목	에너지·농업 관련 주요 품목	에너지 및 비료·대두유 등 일부 필수품 제한
정책 방향	에너지·필수품 공급차질 완화	공급 안정 유지 및 외국선박 활용 제한 강화

[자료: 美 해사청(MARAD) 및 현지 언론 종합]

▪ 자료원 | 폴리티코(8.10), 블룸버그(8.10)

(관세) 美 상원, 러시아 원유·가스 구매국에 2차 제재 관세 부과 법안 통과

- **(개요) 상원,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S.5025)'을 찬반 86-11로 가결(8.7)**
  - 하원 민주당은 동 법안이 러시아 제재 강화를 명분 삼아, 대통령에게 과도한 관세 재량을 위임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 입법 여부는 불확실
- **(주요 내용) 대통령에 2차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제재 권한 부여**
  - ① 법 시행 후 30일 내 모든 러시아산 수입품에 500% 관세 부과 가능
  - ② 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의 상위 5개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 부과 가능
    * 동 관세는 301조·232조·세이프가드 관세 조치와 중첩 적용 가능
  - ③ 단, 해당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구매가 러시아 전체 가스 수출의 15% 미만이고, 해당 구매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예외 적용 가능
- **(전망) 9월 초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민주당 반대로 입법 성사 미지수**
  - 민주당 의원들은 ① 대통령에 과도한 관세 권한 위임, ② 국내 기업과 소비자 부담 증가, ③ 동맹국 상대 관세 무기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 제시
  - 이에 따라 하원 심의 과정에서 대상국 요건, 예외 조항, 관세 종료 조건, 의회 통제 장치 등이 추가·수정될 가능성 존재

▪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Today(8.7), 인사이드(8.7)

(입법) 美 공화당 상원의원,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권한 부여 법안 발의

- **공화당 상원의원 3명, 「무역적자 해소법(Trade Deficit Elimination Act)」 발의(8.6)**
  -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법적 권한 부여
  - USTR이 매년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 상대국을 식별하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15일 이내 해당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 부과 수준과 기간은 대통령이 해당 국가와의 양자 상품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결정

• **관세 예외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상 권한 부여**

- 국가안보·핵심 공급망에 필수적인 품목 및 미국 내 합리적 생산이 어려운 품목 등에 대해서는 관세 적용 예외 허용
- 관세 부과는 의무화하지 않고, 행정부가 무역환경, 산업·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관세를 인상·인하·정지·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 발의 의원들은 동 법안이 무역불균형 완화와 핵심 공급망 보호, 미국 생산자·근로자 및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강조

▪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Today(8.7), 인사이드(8.7)

(반도체) 美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 '파운드리 실사 규칙' 집행 강화 요구

• **(개요) 뮬리나 위원장,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파운드리 실사 규칙(Foundry Due Diligence Rule)'의 유효성 재확인 및 집행 강화 요청**

-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확보 저지를 위해 국제 반도체 공급망 관리 강화 필요성 강조

• **(내용) 바이든 정부 말기('25.1월) 도입된 '파운드리 실사 규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행 지침 마련을 주문**

- TSMC, 삼성 등 파운드리 기업이 중국 기업 또는 중국계 프론트컴퍼니에 첨단 칩을 공급하지 않도록 고객·제품·최종사용자 실사 의무를 부과

  * 16nm 및 14nm 이하 첨단 칩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라이선스 요건의 적용 대상으로 전제

-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AI Diffusion Rule'과의 연계성을 분리하고, 파운드리 및 OSAT* 관련 통제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행 지침 발행을 요구

  * 반도체 조립·테스트 및 후공정 외주업체(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companies)

• **(전망) 파운드리 및 OSAT·패키징 등 후공정 공급망에도 직·간접 영향 예상**

- 뮬리나 위원장은 BIS 담당 차관에게 8월 31일까지 향후 조치 계획 회신 요구
-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계 고객 △제3국 법인 △14/16nm 이하 첨단 공정 △OSAT 거래 등에 대한 고객 실사 및 수출 라이선스 판단 강화에 대비할 필요

▪ 자료원 | 인사이드(8.7)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원전 에너지 (8.5)	S.5254 (상) (8.5)	James Risch (공)	〈민간 원자력 수출법(Civil Nuclear Export Act)〉 ▪ 미국 수출입은행의 민간 원자력 에너지 금융 금지 조항 수정, 미국 기존 및 신흥 원자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중국의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응하는 법안
북한 지원 (8.5)	S.5265 (상) (8.5)	Tim Sheehy (공)	〈주권 활용 의약품 비용 개선법 (Use Sovereignty to Reduce Rx Act, USTRx Act)〉 ▪ 고소득 국가들이 시장 기반 정책에서 일탈하여 미국의 혁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국제 통상 관행을 식별하고 시정하며, 미국 국민이 생명 구조 의약품 개발 비용을 떠안게 만드는 불공정한 외국의 의약품 가격 통제를 시정하기 위한 법안
로봇 산업 (8.6)	S.5310 (상) (8.6)	Mike Rounds (공)	〈로봇 공급망 개선법 (Robotics Supply Chain Improvement Act)〉 ▪ 상무부가 로봇 산업 개발을 강화하도록 미국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중국 대비 기술·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
관세 (8.6)	S.5315 (상) (8.6)	Rick Scott (공)	〈무역적자 해소법 (Trade Deficit Elimination Act)〉 ▪ 미국의 상품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적자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 ▪ USTR이 매년 적자국을 지정해 관세를 조정하며, 국가안보·핵심 공급망·국내 생산 불가 품목은 예외로 두고, 무역관행 개선·미국산 구매 확대 등을 위한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관세 (8.7)	S.5025 (상) ('26.7.16)	Darline Graham (공)	〈2026년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 ▪ **상원을 통과하여 하원에 이송됨(찬성 86표, 반대 11표)** ▪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의 상위 5대 수입국 및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상위 5개국의 모든 수입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 해당 관세는 무역법 301조, 무역구제조치, 무역확장법 232조 및 세이프가드 관세에 추가 적용
예산 (8.8)	S.5043 (상) ('25.12.9)	Jason Smith (공)	〈2027년 세출 및 연장법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Extensions Act, 2027)〉 ▪ **상원이 대체수정안(S.Amdt.6732)을 포함한 수정 법안을 가결, 하원으로 송부** ▪ 기존의 아프리카 무역특혜 연장을 포함하고, 2026년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계속 지출 및 일부 한시 법률·프로그램의 연장 규정

* 8월 11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CSIS	8/18(화) 8:00 am	〈The Hormuz Implications for Energy Policymaking: Japan and South Korea〉 ▪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IEEJ) 테라자와 타츠야 이사장, 고려대학교 이재승 교수, CSIS 제인 나카노 선임연구원이 참여해, 이번 위기가 일본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해외 석유·가스 투자, 전기화·탈탄소화 속도, 그리고 향후 에너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링크
Peterson	8/19(수) 9:00 am	〈The Strait of Hormuz closure: What happens to trade and shipping?〉 ▪ 국제 무역의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며, 그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주요 도전과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국제사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탐구	링크
ITIF	8/20(목) 3:00 pm	〈Can the United States Retain Its Scientific Talent?〉 ▪ 미국의 과학 인재 유출 증가 원인과 대응 정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	링크

* 8월 11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The Rise of the Unstoppable American Tourist (美 해외여행 급증…지난해 유럽 방문 2,400만 건으로 사상 최대)
	미국의 경제 호조와 자산 증가로 2025년 유럽 여행이 2,400만 건을 기록했으며, 여권 보유 비중도 1990년 5% 미만에서 현재 50% 이상으로 상승한 가운데 유럽에서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반발도 확산
The Washington Post	Trump again tries to restrict birthright citizenship after Supreme Court ruling (트럼프, 연방대법원 제동에도 출생시민권 제한 재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기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출생시민권 제한을 재추진했으며, 시민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이번 조치도 법원에서 기각될 것으로 전망
The New York Times	Senate Passes Stopgap Bill to Avert Shutdown, Avoiding Skirmish Before Midterms (美 상원, 셧다운 방지 임시예산안 가결…중간선거 전 예산 공방 피해)
	미 상원은 지출 시한을 한 달 이상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예산안을 가결했으며, 중간선거 전 소모적인 예산 갈등을 피하려는 양당의 의지가 조기 처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
Bloomberg	Five Takeaways From Zuckerberg's 6,500-Word Manifesto on AI (저커버그, AI 모델 개방 강조…데이터센터 지역에 10억 달러 투자)
	저커버그 메타 CEO는 AI 접근성 확대가 권력 분산과 경쟁 촉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소재 지역사회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
USA Today	'There's no joy in living this way.' Families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美 가계, 생활비 부담에 신용카드·대출 의존 확대)
	미국 내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생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30%가 식료품 등 필수 지출에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일부는 가족·지인 대출이나 저축까지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 미국 동부 시간 8월 11일 13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26	美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2026.7월
US26-25	美 USTR「2026 USMCA 자동차 교역 보고서」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7월
US26-24	미국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정책 추진 동향 및 현지 반응	2026.7월
US26-23	美 BIS, 커넥티드 차량 '적격 공급자 목록' 일반 허가제 분석 및 시사점	2026.7월
US26-22	美 반도체 232조 관세 추진 동향 및 현지 업계·기관 평가	2026.7월
US26-21	美 AI 보안 검증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20	트럼프 대통령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 시사점	2026.6월
US26-19	OECD「Steel outlook 2026」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18	미국 중간선거 5월 경선 결과 및 향후 주요 일정	2026.6월
US26-17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현지 동향 및 전망	2026.6월
US26-16	美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 추진 현황 및 현지 반응	2026.5월
US26-15	美 국제무역법원의 무역법 122조 관세 위법 판결 주요 내용 및 전망	2026.5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7.30		
2026.5.28.		

문의	이메일	전화
	mkpark@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